

‘헤이세이(平成) 시대’라는 변곡점: ‘정치의 실패’를 통해 본 일본 민주주의의 오늘

유불란(서강대)

1. 냉전의 종언은 동아시아에 무엇을 초래했는가?

구 소비에트의 붕괴 직후 일본의 저명지인 『文芸春秋(문예춘추)』의 주관으로 열린 어느 대담회에서, 한 패널은 이후 전개될 동아시아 내 역사갈등의 전개양상을 내다보 기라도 하듯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양국 매스컴은...오로지 ‘과거사 청산’과 [위안부 문제 관련] 보상에 대해 서만 말할 뿐, 냉전이 끝난 뒤 일한관계라고 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듭된 한국의 ‘사죄 요구’에 일본이 ‘사죄’를 되풀이하다 보니 일본인의 반한, 혐한감정만 늘어갈 따름입니다. (중략) [그런데 이처럼] 비틀린 관계를 수정하기 위해 논설을 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채질하는 것이 일한양국의 신문이다 보니, 그 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일본 정치가들은 그저 마찰이라도 일까 두려워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 때만 넘기면 된다고 여길 따름이에요. (중략) 지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큰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¹⁾

물론 여기서 갈등의 주된 원인인양 지목된 두 나라 매스컴의 영향은, 향후 한일 간 갈등양상을 특징짓는 ‘반향효과’의 측면에서 중요성²⁾을 갖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해당문제의 궁극적인 원인변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미 새나오던 불협화음을 보다 시끄럽게 들리게끔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당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80년대 초반의 이른바 “日교과서 歪曲”³⁾을 둘러싼 마찰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 자체는 한국과도, 중국과도 냉전이 종식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온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한일 간의 역사갈등은 냉전구도 하에서 공산권에 대한 자유진영 내 연대의 필요성이란 명분을 앞세워, 비록 국내 차원에서는 논란거리가 될지언정 양국 관계의 전면에까지는 부각되지 않게끔 보류될 수 있었던 것이다.⁴⁾

그런데 냉전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격변을 배경으로, 이에 조용해 각 나라에서 벌어진 국내적 환경변화와 함께 역내 상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례로 동독이 민주화되기 2년여 전 벌어진 한국의 민주화는 일본에게 그저 ‘반공 파트너’의 상실로서만 그치지 않았다. 앞서 ‘보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기왕의

1) 田中明·佐藤克己 「『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関係」 『文芸春秋』1992/03 (3월 특별호)

2) 노윤선 『혐한의 계보』 (파주: 글항아리, 2019), pp.133-4.

3) 『한국일보』 1982. 07/22.

4) 야스다 고이치, 이재우(역) 『일본 ‘우익’의 현대사』 (파주: 도서출판 오월의 봄, 2019), pp.167-8.

식민지적인 종속구조를 소위 “냉전 동맹” 하에서의 정치·경제적 조력 관계로 이름만 바꿔 온존시켜 온 데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⁵⁾ 이 점에서 민주화 및 냉전종식 후 한국 측이 이전과는 달리 민간 영역에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식민지배 청산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요컨대 일본과의 관계들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후 헤이세이 30여년(1989-2019)을 거치며 한국은,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어려웠을 자신들 바로 곁의 ‘경쟁자’로서 일본에게 새로이 자리매김 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는 비단 한일관계에서만 그러했던 게 아니었다. 특히 대중 관계의 경우, 중국이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간 일본이 누려온 지역적 패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 만큼, 더 한층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한 관계에서와 유사하게 중일 양국 사이에도 물론 역사 갈등 및 영토분쟁이 줄곧 존재해 왔지만, 냉전 중에는 舊소련에 대한 공통의 경계심을 매개로 본격적인 현안으로까지 도드라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후 양국 국가정책 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감에 따라 그로부터의 쟁점들을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마찰이 갈수록 격화됐다. 그래도 한동안은 정치적 갈등보다는 경제적 협력관계 상의 상호이익을 앞세운 소위 ‘經熱政冷(경열정랭)’적 밀월이 지속되었으나, 점점 더 뚜렷해져만 간 양국 간 경제성장의 격차는 결국 정치적인 경색으로 이어졌다.⁶⁾

헤이세이 시대, 즉 냉전의 종언에서 글로벌화로 향해가는 세계사적 변동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사회 전반에 두드러지게 된 험한 내지 험중이라는 현상은, 요컨대 앞서 살펴본 동아시아 내 역학구도의 급변속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일본의 위상에 대한 대중적 위기의식의 한 양태라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요시미 순야는 전환기 일본이 처한 이 같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일본이 가장 괴로운 것은 이 중간의 시대, 즉 아시아는 아직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에선 하이퍼 소자녀(超小子)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향후 사반세기이다. (중략) 격차사회는 지금 와선 계급사회화의 양상을 보이고 세대 간의 모순도 확대되어 간다. (중략) 일본은 점점 늙어가는 사회가 되고...동아시아 안에선 발전을 계속하는 중국에 밀려날 처지가 된다.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 헤이세이 시대에 대두한 험중적 내셔널리즘이 갈수록 강해질지 모른다. (중략) 경제적 침체 타개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한층 더 취해지고, 감세 조치와 규제완화로 공공영역은 점점 축소되어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부양되더라도 격차는 확대되는 만큼 사회 전체의 열화는 멈추지 않는다.⁷⁾

5) 김성민 『한일/대중/문화 ‘65년 체제’를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2019), pp.35-6.

6) 브래드 글로서먼, 김성훈(역)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파주: 김영사, 2020), p.155

7) 요시미 순야, 서의동(역)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서울: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0), p.304

그에 따르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란, 지금에 와서는 ‘잃어버린 반세기’의 서곡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헤이세이’란 글로벌화와 넷 사회화, 소자녀 고령화의 시대적 변화를 일본사회가 결국 넘어서지 못한 채 좌절해 버린 시대였다는 것이다.⁸⁾

버블경제의 붕괴 이래 2012년의 3.11 삼중재난에 이르기까지 못 쇼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붕괴감각”이 일종의 시대정신처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온 만큼, 이런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 역시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경주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리하여 일각에선 21세기로의 세기전환 시기의 제반 노력들을 두고 일본 근·현대사상 예외적으로 ‘돌출된 시대’였다고 평할 정도였다.⁹⁾ 예를 들어 자민당 장기집권의 폐해에 대한 대중적 문제의식에 힘입어 등장했던 민주당 정권이, 3.11사태 후 작금의 일본에 요구되는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내놓은 「재생전략」은 그런 절박함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현 주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일본이 세계 유수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시절은, 아시아 내 유일의 선진국으로 인정받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막을 내렸다.¹⁰⁾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에서 드러나듯, 기왕의 GDP 증대 식 ‘양적성장’은 이를 가능케 할 토대 그 자체마저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란 것이었다.

양적 성장 대신 비록 지표화하긴 어렵지만 ‘인연(緣)’이나 ‘유대(絆)’ 같은 일본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에 입각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했던 앞서 민주당의 ‘공동창조 국가(共創の国) 구상’¹¹⁾은, 곧 이은 자민당의 재집권과 함께 아베노믹스라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개혁구상으로 대체, 폐기되었다. 이후 아베 정권은 전후 일본사상 최장기 집권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고, 헤이세이 시대가 막을 내린 현재까지도 자민당의 집권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의 새로운 처방으로 그간 어지러이 전개되어 온 슬한 개혁론 러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일까? 하지만 자민당發 해당 정책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글로서먼은 개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그간 일본의 전반적인 정치개혁 상의 지지부진한 양상에 대해 이렇게 코멘트 한다.

[뭔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갈수록 매서워지는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 현대 일본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 국가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엄청나게 동원한 적도 있고 성공을 거둔 전력도 있는 나라가 대체 왜 외부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적인 침체를 해소하지 못하는가? 이런 무기력은 정책결정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

8) 같은 책, p.37

9) 小倉紀蔵 『韓流インパクト ルック코리아と日本の主体化』(東京: 講談社, 2005), pp.105-6.

10) 国家戦略室 『日本再生戦略 ~フロンティアを拓き、「共創の国」へ~ (平成24年7月31日閣議決定)』
p.1(<https://www.cas.go.jp/jp/seisaku/npu/> 2021.08.31.검색)

11) 같은 책, p.2

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내외적 충격들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질 않는다.¹²⁾

대체 어째서일까? 관련해서 해당 논자는 기득권 문제 등 갖가지 요인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그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온 정치적인 안정¹³⁾ 대신 계속되고 있는 정치 영역에서의 혼란과 사회문화 차원에서의 보편적인 “국가적 자부심” 쪽이다.¹⁴⁾ 이들 요소는 그 각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상호작용에 따른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정치적 난국”이 지속되면서 위로부터 그간의 일본정치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정치 리더십¹⁵⁾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장기불황으로 인해 깊어만 가는 아래로부터의 경제적 위기의식,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일본을 더 한층 위태롭게 내모는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역내 주변국들의 부상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맞물리면서, 우경화와 혐한·혐중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본 정치의 오늘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2. 포폴리즘적인 리더십의 부상이라는 문제

이런 정치적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에 해당하는 1955년 이래 93년까지의 38년간, 혹은 그로부터 10개월 뒤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의 집권이 2009년 재차 막을 내리기까지 54년 동안 지속된 소위 ‘55년 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해당 체제는 그간 일본의 정치현상 및 정치과정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능해 왔다.¹⁶⁾ 그 주요 특색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배경으로, 첫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한 일당우위체제, 둘째,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의 보혁 대립구도로 전개된 양대 정당체제, 셋째, 자민당이 국회의석의 단독 과반수를 점하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석의 3할 정도를 차지하는 이른바 1.5정당제 등을 꼽을 수 있다.¹⁷⁾ 하지만 그런 외형적 특징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정치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그 속에서 일본정치가 어떻게 방향 지워져 왔는가에 있다.

[중선거구제 하에서] 자민당은 선거구마다 유력파벌이 경쟁적으로 복수의 후보를 세워, 같은 당 후보들끼리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과반수 확보를

12) 앞의 책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 p.302

13) 이면우 「일본 정치의 전후 레짐과 1990년대 위기」 이면우(편)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과주: 한울 아카데미, 2004), p.21

14) 같은 책, pp.94-96.

15) 김영수 「1990년대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와 정치리더십: 포폴리즘적 정치리더십 탄생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무당파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24, 2002, p.84

16) 이이범 「일본의 55년 정당체제의 변용과 붕괴요인의 분석」 『일본연구』 21, 2003. p.4

17) 정미애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발전」 『동아시아의 역사III (개항-화해)』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463

노린다. 야당으로의 정권교대란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셈이고, 수상은 헌법에 없는 “정권여당”의 파벌역학에 의해 선출된다. 여당의 [특정분야 및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족(族)의원들, 횡적소통이 없는 각 부처 관료들, 그리고 재계에 의한 “철의 삼각동맹”이 밀실에서 경제·사회적 이해 조정을 수행한다. [오히려] 각 부처를 통할해야 할 내각은 구심력을 결여하고 있고, 이런 여당주도 시스템의 그늘 아래서 국회는 공동화되었다.¹⁸⁾

해당 선거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 정도의 득표율을 위해 지역구 내의 핵심 지지자들만 챙기면 족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치인들은 55년 체제 하에서 일종의 ‘거간꾼’이 되어갔다. 당선의 요체가 핵심 세력들에게 지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이익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현실에서, 지지자들의 요망을 담당 부서의 관료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예산을 획득해 내는 데만 치중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흔히 ‘철의 삼각형’으로 일컬어져 온 이 같은 정당-관료-재계(政官財)의 지배연합에 의한 정치리더십은 자민당이 제시한 정책적 목표를 관료 집단이 구체화시키고, 이를 다시 재계가 실현시켜 나가는 식으로 국가운영상의 폭넓은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에선 긍정적 측면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협력 내지 야합 속에서 자민당의 정책조사회 및 국회 대책위원회가 최종의사결정 기구로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공식적인 국가 기구가 무력화되었다는 데 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역시 자연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는 점이다.

김영수는 이로 인해 초래된 국정상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가의 실질적인 정책과정은 사적 기구인 자민당의 ‘정책조사회’가 해당 성청의 관료들과 협의해 처리한다. 각 선거구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정치가들에게 이 과정은 불가결하다. 국가적인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는 각 정당의 국회대책위에 의해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국가운영을 둘러싸고 격돌하지만 그건 표를 의식한 일종의 연출이다.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대안적인 정치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민당의 일당지배를 보조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국가운영은 공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감시되고 검증되지 않았다.¹⁹⁾

지배연합의 이 같은 부패의 고리로 인한 폐해는 70년대를 거치며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전후 일본 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이었던 록히드 사건을 비롯해, 특히 88년 즈음의 리쿠르트 사건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다다른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18) 清水真人 『平成デモクラシー史』(東京:筑摩書房、2018)、p.11

19) 앞의 책 「1990년대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와 정치리더십」 pp.91-2.

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결국 55년 체제는 4년 여 뒤 또다시 불거진 도쿄 사가와규빈(東京佐川急便) 사건을 계기로 당내 실세였던 가네마루 신(金丸信)이 실각하게 되면서, 이후 권력재편의 와중에 자민당이 내부적으로 분열됨에 따라 종언을 고했다.

리쿠르트 사건으로 인한 다케시타 정권의 붕괴 뒤 본격화된 정치적인 혼란과 이와 맞물리듯 벌어진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일련의 위기상황 때문에, 정치 개혁은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그 요체라 할 소선거구제로의 중의원선거제도 전환을 꼭 반기지만은 않던 정치권에서조차 감히 거스르지 못할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파장은 일본정치 전반에 두루 미쳤다. 본래 의도했던 바는 양당구도로 이끌어 투표장에서 이념과 정책을 두고 서로 맞붙게끔 함으로써 권력 교체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변화의 실제 양상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사회당은 만년 야당으로서의 체질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아예 소멸되어 버렸고, 자민당 쪽에선 기존의 파벌 대신 당수로의 권력집중이 벌어졌던 것이다.

야마구치 지로는, 잃어버린 10년이란 정치인들이 정치가로서 마땅히 결단했어야 할 국정상의 조치들, 즉 일시적인 국민부담의 증대를 감수해서라도 적기에 재정 재건을 시도하고, 얼마간 도산이나 실업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산업구조 상의 전환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해 버린지라 발생한 ‘정치의 실패’로 규정한다. 이로부터 그는 90년대를 전후해, 장기집권 여당으로서 자민당이 노정하게 된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한다.²⁰⁾

첫째, 국익 차원의 총체적 판단 대신 개별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버린 ‘이익정치화’. 그에 따르면 만년 여당으로서 자민당은 앞서 살펴본 지역 및 업계의 뒷바라지 역할에 함몰된 나머지, 정책상 우선순위를 가리거나 취사선택하는 능력 그 자체마저 상실해 버린 듯 보일 지경이었다고 비판한다. 즉, 정당마다 보다 역점을 두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상충하는 사회 내의 여타 주장들까지를 한데 아울러서 나름의 체계화된 정책으로 종합시켜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못 이익들이 그저 “잡거상태”에 있었을 따름인 자민당은, 특히 90년대 들어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여기서 낙오된 제휴업계로부터의 청원에 따라 패자구제의 응급조치만 연발했을 뿐, 구조개혁은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둘째, 당내에 만연하게 된 권력 획득 및 유지만을 염두에 두는 ‘기회주의적 성향’, 야마구치는 앞서 개별이익에 대한 고려에 따른 국정차원에서의 총체적 판단의 저해가 특히 1993년의 정권상실 이후 두드러지게 된 포퓰리즘적인 정치로 인해 더 한층 악화되었음을 밝힌다. 실행조치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도로, 어쨌든 ‘빅뱅개혁’, 즉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모색했던 하시모토 정권이 좌절하고 난 뒤 들어선 오부치, 모리정권 하에서는 그저 공공사업을 통한 인기몰이 식 경기대책만 남발되었을 뿐, 98년의 금융 위기가 지나간 뒤 절실했던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일본경제는 다시금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 야마구치 지로, 이원덕(역) 『위기의 일본정치』 (서울: 일조각, 2002), pp.20-33.

셋째, 실질적인 개혁 조치 대신 의미 불명의 정치슬로건만 앞세우는 “논리의 포기”. 70년대 이후 지배연합의 부패상이 거듭해 폭로되면서 조성된 정치개혁에의 국민적 열망 덕분에, ‘개혁’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띠는 슬로건으로 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특히 경제관련 정책마다 거의 반드시 등장하곤 한 ‘구조개혁’ 운운하는 선언은 실제로 어느 쪽으로, 또 어떠한 조치를 통해 경제구조를 바꿔 나가겠다는 것인가? 그즈음 본격화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세의 와중에서, 구조개혁이란 함은 요컨대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시켜 함량미달의 기업은 도태시키고 해당 노동력은 보다 효율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이런 맥락에서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그간의 공공사업상의 저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을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개혁을 외치는 구호만이 난무했을 뿐, 방향성도 필요한 조치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야마구치는 지적한다.

넷째, “책임전가”의 정치.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현 사태의 원인을 전혀 잘못된 방향에서 찾거나, 심지어는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자 엉뚱한 대상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일상적인 비판 기능을 통제하려는 정도를 넘어서, 주변국들을 탓하거나, 심지어는 그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기록해 온 전후 민주주의 그 자체마저 부정할 지경이다.

첫 번째 공격대상은 전후(戰後)란 시대 그 자체이다. 현재 일본의 폐색상황은 전후라는 시대의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이란 것이 저 정치인들의 시대인식이다. 이들은 저들도 전후 민주주의 속에서 이익 분배에 매몰되어 안일을 누리왔던 건 생각지도 않고, 전후의 헌법과 교육이 일본을 나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개정논의에 열심히 참가해 그 기본 법제를 바꾸는 것이 현상을 타개할 최후의 비책이라 호소한다.²¹⁾

이처럼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고이즈미(小泉純一郎)가 그간의 당내 이익 유도형 정치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자기가 소속된 자민당마저 부술 각오가 되어있다고 하며 우정민영화 등 일련의 개혁정책들을 급진적으로 드라이브 해 일본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우치야마는 이런 고이즈미의 파퓰리즘적 정치수법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 인상적인 한 마디를 활용해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정치의 극장화’. 둘째, 여당이나 정부 내 반대를 찍어 누르며 ‘관저주도’ 및 ‘수상지배’로 개혁정책을 주도하는 톱다운 식 정책결정방식. 우치야마 유는 대중의 정념에 호소하는 고이즈미 류 ‘정치의 극화(劇化)’를 통한 개혁추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그의] 지론이었던 우정사업민영화는, 자민당의...이해에 저촉되기에 당내로부터 격렬한 반대가 쏟아졌다. 하지만 고이즈미는 물러서지 않고 개혁

21) 위의 책, pp.30-31.

에 반대하는 자들을 ‘저항 세력’이라 부르며 규탄했다. 2005년...총선거에서는 조반(반대) 의원들을 공인해 주지 않고 해당 선거구에 대립 후보로 ‘자객’을 지명해 보내기까지 했다. 이런 양상은 매스미디어 상에서도 센세이셔널하게 다뤄져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야말로 정치를 극화시킨 ‘고이즈미 극장’의 진면목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 결과 자민당은...전에 없던 대승을 거뒀고, 고이즈미는 영원하던 우정민영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²²⁾

고이즈미 총리가 은퇴한 뒤 재연된 자민당의 혼란 덕분에 민주당은 또 한 번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때 이른 정권봉피를 초래한 그 직접적 계기로서의 3.11 사태가 아니더라도, 집권 직후부터 노정된 민주당 내의 혼란과 국정운영 능력의 부재는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모두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라마지 않던 바로 그 때, 그리하여 전에 없던 지지를 몰아주었음에도 민주당 스스로가 내세웠던 “정치주도”란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리만치 실망스러운 행보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런 지라 2012년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고이즈미 식 포퓰리즘 노선을 관저주도로 다시금 밀고 나가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3. 어려운 시대의 좌절한 사람들: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가짜 약

돌이켜 보면 일본의 전후 고도 성장기란, 본래라면 오히려 서로 상충될 터인 ‘자유 의 확대와 확실성’, 그리고 ‘경제성장과 격차의 축소’가 양립하던 극히 예외적인 시대였다. 이런 양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실생활 면에서의 안정이 지속된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³⁾ 그 결과, 쇼와 시대(1926-89) 말기에 이르면 소위 “1억 총 중류”란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될 만큼 낙관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구가하게 된다.

하지만 헤이세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본격화된 글로벌한 차원의 신자유주의의 충격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의 확산 및 계층 간, 세대 간 양극화 덕분에, 그간의 밝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반적인 불안감으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사회에 이른바 “희망격차”가 만연한 가운데, 이런 처지로 자신들을 내몬 근본적인 원인일 배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변동을 직시하기보다 당장의 원념을 투사할 희생양 찾기에 골몰하는 울분에 찬 ‘패자 그룹’이 대거 생겨나게 되었다.

르상치망 차원의 희생양 만들거나 보상심리로서 배타적인 자긍심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 현재 일본에서뿐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첨예해지면서 포퓰리즘적 “분노의 정치”가 급속도로 세를 얻고 있는 오늘날 서구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때 자신들이 부당하게 패자 그룹으로 끌어내려졌다고 믿고 있는 저들의 행동양식에

22) 内山融 『小泉政権 「バトスの首相」は何を変えたのか』 (동경: 中央公論新社, 2007), p.7

23) 야마다 마사히로, 최기성(역) 『희망 격차 사회 ‘패자 그룹’의 절망감이 사회를 분열 시킨다』 (서울: 도서출판 아침, 2015), p.63

대해 후쿠야마는 이렇게 묘사한다. 한편으로 그들의 분노는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그저 방관만하고 있을 따름인 승자 그룹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저들이 보기에 정부 및 좌파 엘리트들의 비호를 등에 업고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듯 보이는 소수자 집단에게도 향한다. 패자 그룹으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비난받아 마땅한 누군가의 탓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²⁴⁾

이런 식의 책임전가는 민주당 등 소위 ‘좌익’과 더불어서, 현 사태의 또 한 원인으로 지목된 재일 한국인을 향해 네티우익들이 강변하고 있는 ‘특권’론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그들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데, 이런 “무임승차” 탓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어려운 처지의, 즉 패자 그룹 쪽 일본인들은 오히려 복지혜택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실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억지일 따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사실관계를 들어 아무리 설명하려한들 저들이 그런 반론을 ‘음모’라 치부해 버릴뿐더러, 애초에 대화 그 자체마저 거부한다는 데 있다.²⁵⁾

대중적인 르상치망에 조용해 일고 있는 근래의 이 같은 우파 포퓰리즘의 경향성에 대해 엠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자신들의...신념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비판은 결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자신’과 ‘이방인’, ‘우리’ 대 ‘그들’로 양분된 세계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적대적인 의식은 처음부터 비판을 통겨낸다. 그런 비판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유일하게 진실 되고 정당한 투쟁을 이끌어가는 이들을...억압하고 조종하는 일로 치부된다. 그리하여 자신은 어떤 반박이나 의심에서도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더 한층 견고해진다. (중략) 비판적인 보도는 ‘가짜 언론’이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봉기의 가치를 모른다는 증거일 따름이다. (중략) 그리고 자신의 공격성은 정당방위라 미화한다.²⁶⁾

이 같은 억지가 성립할 수 있는 까닭은, 우파 포퓰리즘 측에서 기존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상식을 좌익의 ‘표현 독재’이자 억압이라 전복시킴으로써, 그런 금기의 위반을 일종의 정치적 저항행위라도 되는 양 정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²⁷⁾ 이런 맥락에서 일본 전후 민주주의의 핵심 테제로서의 역사문제와 일상차원에서 이를 끊임 없이 상기시켜 주는 그 상징과도 같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공격은, 요컨대 포퓰리즘류 분노의 정치의 일본적 전개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역역사·반한감정을 초점삼은 이러한 원념이 그저 사회

24)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수경(역)『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서울: 한국경제신문 산경BP, 2020), p.150

25) 야스다 고이치, 김현욱(역)『거리로 나온 네티우익-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서울: 후마니타스, 2013), p.184

26) 카롤린 엠케, 정지인(역)『혐오사회-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서울: 다산 지식하우스, 2017), p.87

27) 위의 책, pp.262-3.

밑바닥에 깔린 불투명한 정념으로서만, 그에 따른 단속적인 혐오 소동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앞서 살펴본 대중영합 노선에의 전환과 맞물리면서 오늘날 일본정치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으로까지 부상하게 됐다는 데 있다. 사실, 반한 감정이란 한국에서 흔히 오해하듯 일본 내 몇몇 우익인사들이 만들어 낸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간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저러한 망언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는 오늘날 일본사회 전반에 “혐한의 토양”이 두텁게 쌓여가는 와중에 전개되고 있는 한국(및 중국)과의 역사문제를 방편삼은 위로부터의 전후 일본에 대한 총체적 공세와는 결을 달리한다.²⁸⁾ 요컨대 헤이세이 이래의 혐한이란, 첫째,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일본의 장기화된 침체와 그에 대비되는 이천 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급성장의 대비로 인한 상처받은 자긍심과 둘째, 그런 열패감을 자신들의 르상치망의 배출구로 삼아 배외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패배 그룹의 부상, 그리고 셋째,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 기존 전후체제에 대한 공세를 더해가고 있는 이념적 움직임이 뒤엉켜 표출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혐한은, 말하자면 이제 그 효용이 다해버렸음을 절감하고서도 그런 ‘전후’에 여전히 애매하게 한 발을 걸친 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헤이세이 일본의 뒤틀린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견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이 유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즈음부터 일본에서 본격화된 한류는, 실은 혐한과 뿌리를 같이하는 사회적 징후라 할 수 있다. 김성민이 지적한 대로 88년의 서울 올림픽 내지는 심지어 2002년의 월드컵 공동개최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한국이란 그들 일상 너머의 타자일 따름이었다.²⁹⁾ 그런데, 이천 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이러한 ‘부재하는 타자’에서 ‘과잉된 타자’로 급격히 전환되기에 이른다. 잘 알려진 것처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상품의 대유행도 유행이었지만, “경제도 산업도 일본은 진정 한국에게 패배한 것인가?” 같은 보도³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리만쇼크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본에 비해 위기를 훨씬 빠르게 극복해 내고 있던 한국의 역량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로운 세기의 도래와 함께 (그들로서) 갑작스레 곁에 다가온 활기 가득 찬 한국의 이미지는, 일본 사회에 헤이세이 시대의 정체와 쇠퇴를 더 한층 부각시켜주는 일종의 ‘뒤집힌 거울상’처럼 비춰졌던 것이다. 민주화의 피어린 역경을, 외환위기를 차례차례 극복해낸 저 한국의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 일본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에 오구라 기조가 “룩 코리아”³¹⁾라 명명한, 한국에 빗대어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거나 개혁을 촉구하는 식의 한국 의식하기가 이때부터 자리 잡게 됐던 것이다.

28) 야스다 고이치, 김현욱(역) 『거리로 나온 넷우익 -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13), p.311; 오구라 기조, 한정선(역) 『일본의 혐한과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서울: 제이앤씨, 2015), pp.10-11.

29) 김성민, 『한일/대중/문화 '65년 체제'를 넘어서』 (서울: 제이앤씨, 2019), p.23

30) 『日本經濟新聞』 2010/09/14, 安西巧, “日本は韓国に負けたのか”

31) ‘룩 코리아’란, 말레이시아의 前수상 마하티르가 서구 대신 일본이나 한국을 배울 것을 골자로 1981년 주창한 ‘Look East Policy(동방 정책)’을 원용해,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지칭하고자 만든 신조어임.

이에 대해 오늘날 한국 쪽에서의 상황은 어떠할까? 글 첫머리에서 한일 양국 마스크 간의 반향효과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인터넷 시대의 본격화와 함께 이제 이 같은 부정적인 상의 확대 재생산은 민간영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일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에서의 일본 의식하기 역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고도성장기 이래 일본이란 한국에서 늘 비교의 대상, 경쟁 대상으로 여겨오지 않았냐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일본 의식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심의 깊이는 여전하되 ‘종언’이니 ‘쇠퇴’니 하는 표현이 난무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논조 방향이 이전과는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앞서 오늘날 일본이 현재 한국의 활기를 부풀려서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듯, 오늘날 한국은 현재 일본의 정체된 현실을 비하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취를 돌려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회자되듯 방역에서의 성과 등, 일견 ‘코리아 애즈 넘버 원’으로 올라선 오늘, 저 일본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난 상대는 우리가 더 이상 구매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일까.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의 어려움을 고소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오늘날 일본의 정체를]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물론 한국 정치는 일본이 겪고 있는 무기력한 상황이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번갈아 집권하는 데서 드러난다. (중략) 그리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스스로 목표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 한다. 한국은 사회를 동원하고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적 목표를 거리낌 없이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상황만큼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중략) 한국의 가장 큰 실패는 일본의 실패를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³²⁾

글로서면이 지적한 사회적 양극화 및 그로 인한 초저출산의 심화 등, 헤이세이 일본의 정체를 빚어낸 일본의 제반 문제점은 실상 한국 역시 그 퇴행경로를 거의 그대로, 아니 보다 심각하게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인 ‘룩 재팬(Look Japan)’은 한국에 여전히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2) 앞의 책 『피크 재팬』 pp.10-11.